

공공사업 효율화와 건설공사 사후평가

차용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1999년 3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방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공사가 종료된 이후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하, 사후평가) 제도가 포함되었다.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및 관리 시 활용이 목적이다. 사후평가 대상사업은 300억 이상 건설공사이며,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사를 선정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300억~500억의 건설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성과(비용, 일정, 안전, 재시공)' 평가를 실시하고,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업수행성과', '사업효율', '파급효과' 평가를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제2항). 그러나 20여년 동안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발주청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이행률이 낮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2020년 의원입법을 통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이하, 센터)가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2). 본 발표에서는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일환인 사후평가 제도의 역사,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후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발전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